

## 도내 주요 기업 가동중단 · 매각철수설 잇따라

## 협력업체 줄도산' 우려도

최근 전북지역 경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.

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된 뒤 도내 굵 직굵직한 기업들이 공장 문을 닫거나 매각설, 철수설 등에 휘말라고 있다.

이처럼 전북지역에 둥지를 튼 기업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있지만, 이를 해결할 뚜렷한 대안은 없는 사활이다.

민간기업이다보니 전북도 등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.

이로인해 도내 중소 협력업체들의 줄도산으로 이어 지는 이른바 '도미노 현상'까지 발생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일각에서는 우려하고 있다.



1. 전주시 팔복동 BYC 전문매장 2. 익산에 위치한 넥솔론 3. 하이트 전주공장 전경 4. 한국지엠 군산공장 정문



(16)XOLON

## ▲넥솔론·BYC·하이트·한국GM 위기···

선박 수주난을 이유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 소가 지난 6월 30일을 기해 가동이 중단된 이 후 익산 넥솔론과 전주 BYC, 완주 하이트진로, 한국GM 군산공장 등의 경영난이 수면 위로 떠 올랐다.

먼저 익산 넥솔론은 생산가동이 중단됐다.

넥솔론은 태양광 웨이퍼를 생산하는 태양광 기업으로 익산수출의 약 10%를 차지할 만큼 우량기업이었다.

그러나 세계 경제 시장의 변화로 지난 2011 년부터 손실을 기록하는 등 위기가 찾아왔고, 결국 2015년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.

그동안 진행된 매각작업이 모두 수포로 돌아 가면서 공장 가동이 사실상 중단됐고 이로인 해 400여명의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상황에 처했다.

현재 전북도와 익산시, 지역 정치권 등에서 넥솔론 근로자들을 돕기위해 동분서주 하고는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.

전북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BYC 전주공장 또한 폐쇄가 결정된 것으 로 알려졌다.

정확한 폐쇄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께로 예상된다.

BYC는 전주공장의 기능(업무)을 인도네시아 공장과 통합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데 이 역 시 넥솔론과 마찬가지로 해외 SPA 브랜드 진 입, 저가브랜드 출현, 소비 패턴 변화 등 시장 변화로 기동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. 완주에 있는 하이트 전주공장은 매각설에 휩

싸였다. 하이트진로는 맥주생산 효율화를 위해 공장 한 곳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공시를 통해 밝혔 는데 하이트진로의 맥주 생산라인이 있는 곳은 전주공장을 비롯해 홍천·마산 등 3곳이다. 당초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매각과 관련한 공

시를 띄울 계획이었지만 보류하면서 당분간 전주공장 매각설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. 이와관련 완주군과 완주군의회는 우려를 표 명하며 "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주공장의 매각

명하며 "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주공장의 매각 설은 하이트진로를 향토기업으로 생각하는 완 주군민과 전북도민에게 큰 걱정을 주는 안타 까운 일"이라고 밝혔다.

한국GM 군산공장도 산업은행이 위기상황으로 진단을 내리고 특별결의 거부권(비토권)이 소멸되면서 철수설에 휘말렸다.

실제 산업은행은 '한국GM 사후관리 현황' 보고서를 통해 한국GM의 국내시장 철수를 조 만간 현실화될 수 있는 위기상황으로 진단했다.

또 한국GM의 버팀목이 됐던 비토권이 소멸 됐다

비토권은 GM이 지난 2002년 10월 대우차를 인수할 당시 채권단 대표로 출자한 산업은행 이 향후 15년 동안 한국지엠의 지분 매각을 반 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.

그러나 이 비토권이 지난달 16일을 기점으로 권리가 끝나 GM이 한국GM 지분 매각과 함께 한국시장 철수를 추진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진 것이다.

현재 군산공장은 준중형 세단 '올 뉴 크루 즈'와 7인승 MPV '올란도'를 생산하고 있지만, 최근 가동률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.

▲위기 극복 대안 없어… 전전긍긍

▲위기 극속 내안 없어… 신신등등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등에서는 위기를 극복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전주 BYC · 익산 넥솔론 등 경영난 수면 위로

태양광 기업 넥솔론, 생산가동 중단 BYC 전주공장, 내년께 폐쇄될 듯 하이트진로 전주공장 매각설 지속화 한국지엠 군산공장도 철수설 휘말려

도-정치권, 위기극복대책 마련 고심 민간기업에 적극 개입 어려워 뚜렷한 대안은 나오지 않아

하기위한 해결책 마련에 고심이지만 뚜렷한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.

이는 사기업(민간기업)이다보니 정치권과 지 자체가 적극 개입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기 때 무이다

이를 증명하듯 지난달 열린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지역경제 위기설에 대해서는 거론되지 않았다.

도 관계자는 "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 시 장성이 떨어지고 경영난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"며 "기업들의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지켜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도와야 하지만 솔직히 대책이 참으로 어렵다"고 말했다. 이어 "전북의 경우 큰 기업들의 본사가 여기

에 없다보니 구조조정, 노시문제, 경영난 등의 사태가 일어날때마다 피해가 발생하는 데 경 기변동에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"며 "지역 중소업체들이 대기업 상황에 따라 문을 닫거나 운영하는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는 있다"고 설명했다.

또 "경제 피해를 최소화기위해 신재생에너지 와 식품바이오, 탄소를 필두로 하는 미래 관심 소재 부분에 대해 집중 육성하고 있다"며 "신 규 R&D지원 기업 발굴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관련 중소기업 육성도 펼치고 있다"고 덧 붙였다.

상황이 이렇다보니 대안은 없이 질타만 나오 고 있다.

실제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은 "전북 경제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지만 전북도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이렇다 할 대책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방관자적 자세만 취하고 있다"고 지적했다. /뉴시스

